

폐캔수집 · 재활용 정부지원 절실

안백순 / 한일제관(주) 영업부장

환경처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금속 캔에 폐기물 예치금을 부과하였고, 시행 1년만에 100% 인상하겠다는 입법 예고가 있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의 부당함과 업계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환경처는 이를 수렴하려는 자세가 아닌 것 같다.

폐기물 예치금 제도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하고, 수거량 만큼 환불받도록 하여 사업자의 적극 참여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무구조의 취약함, 수거조직, 설비 등이 전무한 제조 업체가 수거하여 환불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시행 1년간 예치금 환불 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을 보아도 제도상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목적이 사업자의 참여보다 환경 투자 자원 확보에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이제 다시 예치금 100% 인상에 매년 환경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가 변동 지수를 감안하여 부과시키는 것은 관련 기업의 부실화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금속 캔은 알루미늄 캔과 스틸 캔

으로 구분되는데, 알루미늄 캔의 경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성으로 회수 재활용에 문제가 없고, 스틸 캔의 경우 포항제철 등 철강업체에서 폐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을 완료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예치금 인상에 앞서 어떤 방향으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가.

첫째, 폐캔의 회수 방법과 주체 문제다. 우리 업계의 견해는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차를 개조 또는 운용의 묘를 기하여 수거하고 일정 장소에 집하해 주어야 한다. 물론 재활용의 준비 상태에 따른 분리 수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거하여 집하 장소에 쌓여 있는 폐캔을 알루미늄, 스틸로 재질별 분리하고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압착(부피 극소화)하여 재생 업체에 판매하는 과정은 비영리 단체나 관련 기업 또는 기업 단체에서 맡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폐캔 재활용 센터 설

립 운영에 관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수용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원 절약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의 꾸준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겠다. 예를 든다면 캔의 두께를 최대한 얇게 하고, 인쇄 도수를 줄이고, 스킵 캔 재활용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석(TIN)을 줄이기 위한 연구 검토 등이 계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의 협조와 의식 전환이 요청된다. 꾸준한 대 국민 홍보활동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역시 공동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금속캔 관련 업계(소재, 제관, 식음료 제조업체)는 이상과 같은 방안의 구체화, 정부 각 부처와 관련 업계의 협조 체계 구축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으며, 금속캔에 대한 예치금은 뚜껑 부착형, 분리형 공히 2원(현행 2원, 4원)으로 조정하여 줄 것과 예치금 납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손비 처리 가능토록), 또한 예치금 외에 스스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경비를 예치금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화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책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